

# EU Brief

| EU 동향 |

- 유로화 위기, 재도약을 위한 성장통인가?  
Crisis in the eurozone: a symptom of growing pains?
-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nother financial crisis in EU
- 유럽의 대북 인권정책  
E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EU 무역장벽규정의 내용과 운용 현황  
EU's Trade Barriers Regulation
- EU 제조업의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Competitiveness of EU's manufacturing sector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유로화 위기, 재도약을 위한 성장통인가? ..... 002  
Crisis in the eurozone: a symptom of growing pains?



## EU Economy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가능성 ..... 004  
The possibility of another financial crisis in EU



## EU Politics

유럽의 대북 인권정책 ..... 009  
E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rade & Investment

EU 무역장벽규정의 내용과 운용 현황 ..... 013  
EU's Trade Barriers Regulation



## Industry Trends

EU 제조업의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 018  
Competitiveness of EU's manufacturing sector



## EU Law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U의 환경 관련법 ..... 024  
EU's environmental legisl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ocial Issues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 029  
The decline of multiculturalism in EU



## Report Review

독일은 유로지역 경제의 모범답안인가? ..... 033  
Why Germany is not a model for the eurozone



## EU Centre news

제2회 EU Week 개최 ..... 035  
The Second "EU Week"



# 유로화 위기, 재도약을 위한 성장통인가?

Crisis in the eurozone: a symptom of growing pains?

현재 유로화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위기의 파고는 지난 5월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유로 국가들의 재정악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며 유럽 재정위기가 과연 해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위기’의 수준을 넘어 유로화의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대두되기도 한다.<sup>1</sup>

위기 해결의 중심에 서있는 나라는 유로지역 최대 혹은 자국인 독일이다. 독일의 움직임에 따라 EU와 유로화의 향방이 가늠될 정도로 독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에 최대 9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더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로지역 재무장관들이 범유럽 채권 발행과 유럽안정기금 증액 방안을 제시하자 독일은 즉각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 이상 다른 회원국의 재정 문제를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독일을 국가 이기주의로 몰아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유로화 체제는 각기 다른 경제 상황에 처한 복수의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빠지면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한 통화에 묶여 있는 통화동맹의 상황에서는 각국이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통합된 통화의 통화정책은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

는데, 일부 국가의 경제 사정에 맞춰 집행되는 통화정책이 다른 회원국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로화의 경우,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사정에 초점이 맞춰져 유로화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방수가 되는 것도 이들 양국 일 수밖에 없다. 독일은 그동안 자국의 출혈을 감수해 유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어떤 국가라도 독일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면 국내 정서를 고려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유로화가 통화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정책 운용을 회원국들의 고유권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발하는 회원국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재정부담을 떠안길 수는 없는 입장이다. 리스본조약에서조차 이를 해결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즉, 독일의 반발은 한 국가의 수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를 강제하거나 중재할 제도적 해결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로화는 이대로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유로화는 EU의 핵심이며, EU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원기금을 늘리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경제 처방은 결코 각국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정통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각국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은 유로화가 위기에 휩싸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성장통을 딛고 한층 더 견고한 단일통화체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한해가 될 것이다. ★

The eurozone currently faces the biggest threat since the Euro was introduced. The rising threat of a major financial crisis was put on hold as eurozone members agreed to bail out Greece from its debt crisis in May. The problem was temporarily solved until various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s began to deteriorate in countries, such as in Ireland, Portugal and Spain. Currently, there is no clear solution for solving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and some are asking whether the eurozone will break up as a result of these events.

Germany, the biggest exporter in the eurozone,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solving eurozone's problems. Germany's policies and its decisions will shape the future of the eurozone. Germany strongly opposed when finance ministers of a number of eurozone countries suggested an idea of issuing pan-European bonds and that the EU should increase the size of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Chancellor Merkel argued that creating joint euro sovereign bonds would lead to EU treaty problems and it is unnecessary as it would withdraw incentives for countries to deal with their reforms. The major reason, however, is the political difficulties in bailing out other members with its taxpayer's money.

One cannot accuse Germany of being egocentred as the core problem lies in the foundation of the currency union. The eurozone is made up of countries with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and those in trouble cannot fix their imbalances by depreciating their own currency. In a currency union, its integrated monetary policy can only reflect the economic situation of a few specific countries and hence conflicts arise as not all member states can agree to the policy decision.

In the case of the eurozone, the monetary policy

management strongly reflects the economic situation of Germany and France, which are its major economies. As a result, when problems arise they are the ones left out to bailout other countries in trouble. Until now, Germany carried out this role, but German voters have started to strongly oppose against further bailouts. Any government in such a position would have no choice but to carry out measures that reflect voters' views and the political mood in its country.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 eurozone is a monetary union with its members conducting their own fiscal policies. As Germany's reluctance to continue bailing out other eurozone members is a logical step due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current situation, the eurozone need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guarantees to provide a solution when difficulties arise. But without such a mechanism, will the eurozone break up?

No, is the answer. The Euro is the core of the economic strength of the eurozone and it is also more than that. It reflects the political will of European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integration.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hat the eurozone needs now is the political decision to fix the fundamentals rather than to continue to provide temporary solutions to a permanent problem. It needs to move towards a more integrated fiscal policy, but the eurozone is in need of a leader with political will to fix the system. 2011 will be the turning point that will decide the future of the eurozone and we will find out whether the sovereign debt crisis of 2010 was a symptom of growing pains or just the beginning of a long drawn crisis. ★

<sup>1</sup>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상품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연초부터 “유로화는 길어야 20년 안에 사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 9월 모건스탠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150명 중 “유로화의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65%인 반면 “해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another financial crisis in EU

Bailing out Greece from financial crisis helped calm the market for few months, b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crisis is rising in the EU. This time, the epicentre is in Ireland. If the instability in Ireland spreads to peripheral economies such as to Spain and Portugal, EU's problems would be heightened. A crisis in Spain, which accounts for 8.9% of EU's economy, is going to be the nail in the coffin. However, Spain's situation is somewhat different to that of Greece and Ireland. The possibility of default is much lower in Spain as its government debt-to-GDP ratio is not as high and its public sector's external debt is below 20% of its GDP. The EU and the IMF have temporarily fixed the problems in Greece and Ireland by co-financing the rescue package, yet this cannot be a permanent solution. The member states now face an institutional challenge of maintaining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 진정세를 보였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는 상황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잠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유럽발 재정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진원지는 유럽의 강소국 모델로 각광받던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었던 은행부실의 후유증으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이후 아일랜드의 CDS 프리미엄과 독일 국채 대비 가산금리가 동시에 상승하여 11월 2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sup>1</sup>

아일랜드가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시장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32년 이래 최대 예산 감축안에 적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OECD는 2010년 1.5%를 기록했던 포르투갈의 성장률이 2011년에는 -0.2%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스페인은 2010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가운데 3/4분기 성장률도 0% 수치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 ★ 재정 취약국들의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이러한 가운데 강력한 수준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없다면 유로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는 분석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자국 통화 절하를 통해 부채위기를 이겨낸 아이슬란드와 달리 유로 회원국들은 통화 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으므로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서유럽과 남유럽의 경제적 격차는 위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금융위기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심화된 구조적 불균형은 다시 유로화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sup>1</sup> 아일랜드의 CDS 프리미엄(bp): 396(10/18) → 597(11/8) → 503(11/18) → 601(11/29)

### 아일랜드의 은행부실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가

#### 위기를 다시 촉발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는 아일랜드 은행부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 생겼던 거품 붕괴의 후유증과 그에 따른 은행부실의 확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마디로 금융위기 이전에 누렸던 주택경기 호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1995년 3만 개에 불과하던 연간 주택 공급량이 2006년 9만 3,000개로 급증할 정도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건설 경기가 좋았다. 이에 은행들은 해외에서 주택건설 자금을 앞다퉈 차입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함께 건설 거품이 꺼지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60% 이상 급락했고, 이로 인해 은행부실이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모기지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자 정부는 파산지경에 이른 은행들에 4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정부부채 비율도 상승했다.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9년 -14.6%에서 2010년 -31.9%로 늘어나 EU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상회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99.4%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 ★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정적자	0.1	-7.3	-14.6	-31.9
정부부채	25.0	44.4	65.6	99.4

자료: Eurostat

이러한 후유증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2008년 -3.5%, 2009년 -7.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 국가 중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

내로 줄이는 고강도 재정긴축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2/4분기와 3/4분기에 아일랜드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고강도 재정긴축 이행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EU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방안」에 국가 디폴트 시 민간투자자들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이 포함되자 투자자들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했다. 국채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거액의 예금 인출이 늘어나 자금 압박은 더욱 가중되었다.<sup>2</sup>

결국 아일랜드는 11월 28일 EU와 IMF로부터 총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이 중 350억 유로가 은행권에 지원될 예정인데, 뱅크 오브 아일랜드(Bank of Ireland), 앵글로 아이리시 뱅크(Anglo Irish Bank), 얼라이드 아이리시 뱅크(Allied Irish Bank) 등 주요 은행들은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는 유로체제의 향방을 좌우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패키지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유로지역 국가로 번저간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감이 유로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포르투갈의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1~9월) 늘어났으며, 스페인은 상당기간 경기후퇴가 예상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겹칠 경우 재정

<sup>2</sup> 박진호 (2010), "아일랜드 은행위기의 전개과정과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 2010-46호), 한국은행.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위기가 퍼져나갈 위험도 있다.

★ 최근 재정 취약국들의 신용등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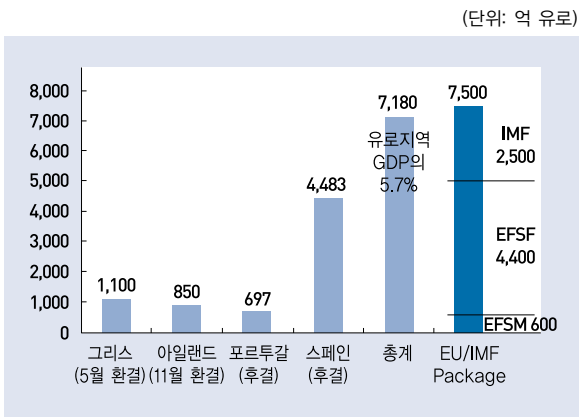
국가	날짜	평가 기관	동향	
			등급	전망
그리스	2010.4.27	S&P	BBB+ → BB+	Negative
아일랜드	2010.11.24	Fitch	AA- → A+	Negative
포르투갈	2010.4.27	S&P	A+ → A-	Negative
스페인	2010.5.28	Fitch	AAA → AA+	Stable

자료: Eurostat

특히 문제는 스페인이다. EU GDP의 8.9%를 차지하는 스페인의 경제 규모<sup>3</sup>는 그리스(2.0%), 아일랜드(1.4%), 포르투갈(1.4%)보다 훨씬 크다. 그러다보니 디폴트 위기 시 투입해야 하는 구제금융 규모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가 각각 1,100억 유로와 850억 유로인 데 반해, 스페인은 약 4,5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EFSF의 지원 금액이 총 7,500억 유로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그 절반을 상회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EU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페인을 ‘방 안의 커다란 코끼리’와 같다고 평가하며, 아일랜드나 포르투갈보다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sup>3</sup> EU 회원국 중 5번째: 독일(20.4%), 프랑스(16.3%), 영국(13.3%), 이탈리아(12.9%), 스페인(8.9%) 順

★ 향후 3년간 국가별 필요재원 추정액



주: 1) 필요재원 추정액은 재정적자 및 국제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임  
 2)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유럽재정안정기구  
 EFSM(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자료: 이종규 외 (2010. 6. 10.),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의 향방”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재정긴축 이행 여부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관건

현재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11.4%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는 63.5%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5월 그리스 경제위기 당시 호세 사파테로 총리의 부실 저축은행 국유화 및 긴축정책 발표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권 지지도 하락 및 파업 등의 요인으로 후속 경제 개혁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긴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계획이지만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시적인 회복 조짐을 보여 기대를 모았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후퇴가 재연되고 있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 기업의 대금납부 지연 등 실물부문의 정체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유로체제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20% 이상의 실업률과 2000~2007년간 2배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스페인 경제의 호황을 이끌어온 부동산 시장이 일단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저축은행<sup>4</sup> 부실 확대도 부담이다. 모기지 대출<sup>5</sup>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투자 관련 대출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그중 건설부문의 대출 규모가 GDP의 41%(약 4,700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지난 7월 유럽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방코산탄데르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다른 나라 은행들과 비교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반면, 저축은행들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스페인 저축은행의 2010년 만기 부채 수준은 60억~70억 유로이지만 2011년에는 450억 유로, 2012년에는 600억 유로에 육박하여 어려움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는 차환이 금지되어 향후에는 부실을 일시적으로 막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경제가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는 정부부채의 비율이 63.5%로 양호하다는 점과 공공부문의 외채 비중이 20% 이하여서 국가부도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점이다. 특히 스페인 국채의 상당 부분(2,033억 유로)을 자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은행들이 한꺼번에 국채를 내다팔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국채 수익률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6월 그리스 사태 여파로 수익률이 치솟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년 만기 채권은 지난 6월 2.3%를 기록했으나 12월 현재는 1.25%에 머물고 있으며 5년 만기 국채는

<sup>4</sup> 저축은행은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sup>5</sup> 2007년 이후 모기지 대출이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일반은행의 모기지 대출 비중은 12.5%에 불과한 반면, 저축은행은 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3.3%에서 2.9%로 하락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취약국들은 국채만기 도래 시기에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스페인은 이와는 다르게 근시일 내에 만기가 되는 대규모 국채가 없어 국가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재정 관련 통계가 시장의 불신을 받았던 것과 달리 스페인의 정부 통계는 비교적 신뢰를 받고 있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분명 스페인은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스페인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는 재정긴축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정부의 행정적 리더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연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만약 이러한 행정적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스페인은 시장으로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 스페인의 긴축계획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적자 목표치	-11.4	-9.8	-7.5	-5.3	-3.0
경제성장률	-3.7	-0.4	0.9	1.8	2.2

자료: EU, OECD 자료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종합

유럽 재정위기 재부상의 의미

EU는 IMF와의 공동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와 아일랜드 문제를 임시로 봉합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결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스페인 재정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유로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들을 하나의 통화와 금융정책으로 묶어놓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사한 사태는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책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첫째 유로지역을 완전한 재정공동체로 만들어 모든 경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EU가 재정정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게 되면 회원국 주권을 훼손할 수 있어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유로지역이 단일 채권을 발행해 공동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로지역의 국채 금리는 물론 유로화의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제금융에 부정적인 서유럽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EU는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국민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유럽의 대북 인권정책

## E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EU's policy on North Korea has been undertaken in diverse ways. Its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draw particular attention as they reflect the underlying values and norms of EU's Common Foreign Security Policy. To share the normative value of the EU, it has tried to address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through bilateral talks, humanitarian aid and multilateral approaches. Notwithstanding some scepticism, the E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should be hailed as a meaningful step towards a further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EU의 가치를 반영한 대북 인권정책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 참 껄끄러운 시기다.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 점점에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는 항상 ‘북핵’이라는 북병이 숨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과는 별개로 이를 다루어야 한다.

EU와 북한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5년에 발생한 북한 대홍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홍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세계 각국의 도움이 이어졌다. EU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성을 보였다. 그러나 EU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사회 및 정치 체제의 변화에까지 관심을 보였다. 시급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 상황 개선 및 점진적인 체제 변화까지 도모했던 EU는 대북 인권정책을 즉흥적이고, 임시변통적인 방편에서 다루기보다는 유럽적 사고와 가치를 반영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자 했다.<sup>1</sup>

### EU의 신아시아전략과 대북 정책

EU 대북 인권정책의 기초는 2000년 「코토누 협정

(the Cotonou Agreement)」에 규정된 인권 관련 조항들에서 그 기본 틀을 찾을 수 있다. EU는 코토누 협정에서 대내·외 정책에 있어 개발, 빈곤퇴치, 무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예방, 인권존중, 민주화 및 대규모 이주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일방적인 경제원조보다는 시장접근의 확대 등을 통한 포괄적인 경제 및 통상 관계 형성과 정부 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아시아전략(Towards a New Asia Strategy)이 수립되었고, 2001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동반자관계 고양을 위한 전략적 틀(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이 채택되었다. 이 전략적 틀에 따라 EU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상호교역과 투자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퇴치와 발전도 지원하고자 하였고,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도 추구하였다. 이런 토대 위에 아시아 지

<sup>1</sup> 박채복 (2006). “EU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한국정치학회보』, 40(2), 215-233.

<sup>2</sup> 유럽연합대표부 (2004). 대외개발원조정책 <[http://www.koreanmissiontoeu.org/bbs\\_data/db\\_b01/foreign%20aid.pdf](http://www.koreanmissiontoeu.org/bbs_data/db_b01/foreign%20aid.pdf)>





역 내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불어 EU 내에서 아시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자 했다.

EU의 대아시아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북 정책도 발전하였다. EU는 1999년 7월 「한반도 합의문: EU의 대북지침」을 채택하였고, 2000년 10월과 2000년 11월에는 「대북 행동지침(European Union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하였다. 이런 기본 정책 틀 속에서 EU는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 11월에 채택된 대북 행동지침에 따라 북한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존중하는 국가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한 외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였다.<sup>3</sup>

대화를 통한 인권 문제 접근법

이런 배경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노력이 시도되었고, 그 루트가 바로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와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였다. 정치 및 인권 대화는 북한체제 붕괴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제로 볼 수 있다.<sup>4</sup>

정치대화는 1998년 시작되어,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회담을 전후로 활성화되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EU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였고, 당시 참여했던 EU 회원국 중 8개국이 북한과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EU-북한 간 정치대화도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2002년 제1차 북핵 위기 발생 후 정치대화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특히, 2005년 EU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 북한과 EU의 정치대화 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Category), 개최일 (Date), 장소 (Location). Rows include 제1차 through 제10차 meetings with dates and locations like 브뤼셀, 평양.

자료: The Delegation of the EC to the Republic of Korea 정리

북한은 EU와의 정치대화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제7차 정치회담 후 EU-북한 간 정치대화는 3년간의 공백기를 갖게 된다. 또한 제8차 회의 이후 재기된 정치대화는 북핵 사건 이전보다 파급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10년 넘게 이어진 정치대화는 경제협력 및 북핵과 같은 이슈와 함께 인권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통로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정치대화와 함께 인권대화도 실시되었는데, 인권대화는 남북한 화해 무드가 한창이었던 2001년 6월에 시작되었다. 제1차 인권대화에서 북한대표단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북한식 인권 논리를 주장하면서 외부의 압박에 대처함에 따라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02년 6월 제2차 인권대화가 개최되었으나, 북핵 문제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2차 인권대화에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2차 인권대화를 통해 EU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한 압박정책을 구사하였다.<sup>5</sup>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작업과

★ EU의 대북 지원

Table with 12 columns: 지원방안 (Support Method),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Total). Rows include 인도적지원(ECHO), 식량지원·농업재건, NGO와의 협력사업, 소계, 기술지원, KEDO, and 총계.

함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의 내부 상황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전술하였듯이, EU의 대북 지원은 1995년 대홍수가 발생한 때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부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하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인도적 지원과 함께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문 및 필요한 기술지원도 시도되었다. 이런 노력은 EU가 작성한 2001~2004년 북한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에 잘 나타나 있다.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4년까지 지원금으로 3,500만 유로를 책정하면서,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시도하였다.<sup>6</sup> 그러나 북핵 사태 이후에는 산발적 지원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긴급식량 지원을 했으며, 2007년 홍수 피해 후에도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양자 회담과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외부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 작업도 병행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엔을 통한 다자

주의적 접근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전략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유엔의 기관을 통해 대북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상정하고 채택했다.

★ 유엔 기관을 통한 EU의 대북 인권 개선 결의안

Table with 2 columns: 유엔기관 (UN Body), 결의일 (Date of Resolution). Rows show resolu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cross various years.

자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7년 최초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EU의 행보가 계속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 EU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다.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본

3 European Commission (2000).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4 Ford G., Kwon S (2008). North Korea and the Brink: Struggle for Survival. London: Pluto Press.

5 이재승 (2009). "EU의 외교환경과 한반도 정책" 김성철 (편저), 『외교환경과 한반도』(p. 196). 서울: 세종연구소.
6 European Commission (2002). The EC-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untry Strategy Report 2001-2004.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는 양자 대화의 한계 점을 보완해주었으며, 전방위적 대북 인권 개선 압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의 가치와 규범이 반영된 대표적 대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인권정책이다.<sup>7</sup> 물론 EU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U가 취한 다양한 접근법 그 자체는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물질적인 이해관계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규범적인 면을 강조한 양자, 다자적 틀을 이용한 접근이 느리지만, 결국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 ★

이무성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up>7</sup> Lee Moosung (2007). The EU's Korea relationship: Enlargement Effects. *Asia Europe Journal*, 5(3), 367-379.



# EU 무역장벽규정의 내용과 운용 현황

## EU's Trade Barriers Regulati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r Super 301, is the US' principal law, which is used as a unilateral tool to address unfair trade practices. The EU has a similar law but it is not widely known. EU's Council Regulation No. 3286/94, which is known as the Trade Barriers Regulation, is an instrument to protect EU companies from unfair trade barriers. EU companies can complain about obstacles to trade in third countries and they can have direct access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vestigations can lead to different solutions by various means such as us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making the system transparent, the overviews of current TBR investigations are published on the Commission's website. There have been 3 TBR cases against Korea, regarding "subsidisation of shipbuilding industry," "imports of cosmetic products," and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 products." Before the Korea-EU FTA comes into effect, Korean firms must be aware of EU's TBR investigations and Korea should consider adopting a similar system.

### WTO 출범에 발맞춘 TBR의 제정

미국의 301조나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일방적 무역제재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EU도 한국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해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EU의 무역장벽은 미국의 무역장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EU의 이사회규칙 3286/94는 일반적으로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이라고 불린다. TBR은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역내 산업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러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EU집행위가 해당국 정부와 협상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EU의 TBR 제정 과정은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회는 웰시(Welsh) 보고서에서 반덤핑 조치만으로는 공동체 산업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방어 권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어서 301조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가 <공동체 시장의 회복을 위한 통상정책수단 강화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1984년 신통상정책조치(NTPI: New Trade Policy Instrument)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EU 내부에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

과로 WTO가 출범하게 되자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했고, TBR이 NTPI를 대체하게 되었다.<sup>1</sup>

###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TBR의 목적은 무역장벽(obstacles to trade)으로 인한 공동체 시장의 피해(injury)와 제3국 시장에서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adverse trade effect)를 제거하는 것이다.

TBR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장벽이 존재해야 하는데, TBR에서 의미하는 무역장벽이란 제3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무역관행 중 국제무역규범(International Trade Rules)상 EU가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 대상을 말한다. 여기서 국제무역규범이란 WTO협정과 부속협정, EU가 당사자인 무역협정을 뜻한다.<sup>2</sup> 1994년 제정된 규칙에서는 WTO 협정과 복수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만을 의미했으나, 2008년 동 규칙을 개정하는 이사회 규칙 125/2008을 채택하면서 FTA와 같은 양자 간 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도 포함하게 되었다.<sup>3</sup>

<sup>1</sup> EU통상연구회 (2000). "EU의 통상정책과 법"

<sup>2</sup> TBR 2.1조.





TBR을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무역 장벽으로 인한 ‘피해’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란 무역장벽이 EU의 상품, 서비스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주거나 그러한 피해의 위협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란 무역장벽이 제3국의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EU 기업, 경제, 일부 지역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sup>5</sup>

피해를 입은 EU 산업단체, 피해를 입은 사람(법인, 자연인), 회원국이 TBR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공동체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인 법인, 공동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가 청원할 수 있고,<sup>6</sup> 제3국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EU 기업 및 하나 이상의 공동체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가 청원할 수 있다.<sup>7</sup> EU 회원국은 공동체 시장에서의 피해와 제3국 시장에서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모두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sup>8</sup>

청원을 할 때에는 청원서와 함께 피해 또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U집행위가 본격적인 조사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협의(consultation) 절차를 진행하는데, TBR에 따라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를 진행한다. 만약 EU집행위와 자문위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청원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청원의 내용이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청원은 취소된다. 조사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은 청원일로부터 4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sup>9</sup>

EU집행위는 자문위와의 협의를 거쳐 증거가 충분하고, 공동체 이해를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에서는 제3국의 무역장벽과 그로 인한 피해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국에 통보하고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통상적으로 5개월 내, 사안이 복잡할 경우 7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자문위에 보고한다.<sup>10</sup>

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공동체의 이해를 고려할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TBR 절차는 종료(termination)된다.<sup>11</sup> 조사결과, 제3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TBR 절차는 중지(suspension)된다. 또한 조사절차 종료 후, 또는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전이나 도중 또는 그 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중지하고 관련 협상을 수행한다.<sup>12</sup>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제3국이 취한 조치를 감시하게 된다.<sup>13</sup>

마지막으로, 국제무역규범상의 공동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조치의 가장 비근한 예는 WTO 제소이다. 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3국이 동 조치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문제 조치 폐지 또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당사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결

<sup>3</sup> European Commission (2008). Council Regulation (EC) No 125/2008 of 12 February 2008 amending Regulation (EC) No 3286/9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in the field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Community's right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p>4</sup> TBR 2.3조.

<sup>5</sup> TBR 2.4조.

<sup>6</sup> TBR 3.1조.

<sup>7</sup> TBR 4.1조.

<sup>8</sup> TBR 6.1조, 6.2조.

<sup>9</sup> TBR 5조.

<sup>10</sup> TBR 8조.

<sup>11</sup> TBR 11.1조.

<sup>12</sup> TBR 8.2(a)조, 8.3조.

<sup>13</sup> TBR 11.2(b)조.

<sup>14</sup> TBR 12.1조.

정된 권고를 따라야 하고,<sup>15</sup> 그에 따라 양허의 정치 또는 철회, 관세인상 또는 기타 수입부과금 도입, 해당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수량제한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6</sup>

##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등에도 적용

TBR 운용 현황은 EU집행위 홈페이지에 그 과정이 공개된다.<sup>17</sup> TBR 청원은 피해를 입은 EU 산업단체,

### ★ TBR 절차 운용 실적 (2010. 12. 현재)

국가	분야	조치
아르헨티나	섬유/신발	가족 수출 및 완성피혁제품 수입 제한 조치 섬유 및 의류 수입 제한 조치
브라질	주류	코냐 지리적 표시
	섬유/피혁	섬유제품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 면허 제도
	화학	SCM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 면허 제도
	철강	스테인리스 철강판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면허 제도
	항공기	항공기 수출보조금 제도
캐나다	자동차	타이어 수입 제한 조치
	주류	와인 지리적 표시
칠레	식품	햄 지리적 표시
	수산물	황새치 선적 제한
대만	전자	CD-R 기술 특허의 강제 라이선스
콜롬비아	자동차	수입차 부가세
인도	주류	주류 수입 및 판매 제한 조치
일본	섬유/피혁	완성피혁 제품 수입 제한 조치
한국	조선	조선 산업 보조금 지급
	화장품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
	의약품	의약품 가격 및 환급 차별 조치
태국	음반	음반 불법복제
터키	의약품	의약품 수입 제한 조치
우루과이	주류	스카치 위스키 수입 및 판매 제한 조치
미국	인터넷도박	인터넷 도박 금지 및 차별적 집행
	농산물	종유 제품 보조금 지원 제도
	식품	거자 수입 제한 조치
	철강	1916년 반덤핑법
	음반	음반 라이선스
	섬유/피혁	섬유제품 원산지 규정

<sup>15</sup> TBR 12.2조.

<sup>16</sup> TBR 12.3조.

<sup>17</sup> TBR 관련 자료와 사건은 EU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trade/tackling-unfair-trade/trade-Barri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법인, 자연인), 회원국이 할 수 있는데, 주로 회원국보다는 기업, 회원국 산업단체, EU 산업단체가 청원을 하고 있다.

1996년 이후 27건의 TBR 조사절차가 개시되었다. 미국과 브라질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3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조사를 받은 국가이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2건, 칠레, 콜롬비아, 대만, 인도, 태국, 일본, 우루과이, 터키 등이 각 1건씩 조사를 받았다.

기존의 무역구제조치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TBR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미국-인터넷 도박), 지재산(지리적표시, 라이선스, 불법복제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세 건의 한국 관련 사건

한국에 대해 TBR이 적용된 사건은 화장품, 의약품, 조선 보조금의 세 건이다. 화장품 사건은 유럽화장품 협회인 COPILA가 1998년 4월 한국의 제도적 요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원하였다. EU집행위는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제도가 EU 화장품의 수출 및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WTO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정부는 조사 기간 중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고, 양자협의를 거쳐 1999년 7월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2001년 1월 한국에 대한 TBR 절차를 중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이행을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18</sup> 이후에도 EU는 한국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칙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해왔고, 결국 4년간의 추가적인 협의 끝에 2008년 9월 공식적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결정하였다.<sup>19</sup>

두 번째 의약품 사건은 유럽제약산업협회인 EFPIA

<sup>18</sup>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법제처.



가 1999년 6월 한국의 가격정책과 환급에 관한 제도가 EU산 의약품에 차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청원한 것이다. 조사 개시 이후, 환급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WTO 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00년 11월 TBR 절차를 중지하고, 한국의 이행을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이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아직 감시대상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sup>20</sup> 한편, 한·EU FTA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4개 부속서 중 하나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안정성 평가에 대한 EU의 이해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다.<sup>21</sup> 이에 따라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적용되면 동 사건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조선 보조금 사건은 유럽 조선협회인 CESA가 2000년 10월 청원하여 개시되었다. 이 사건은 WTO 제소로까지 이어졌는데 먼저 EU가 TBR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3년 6월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sup>22</sup> WTO 패널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선수금 환급보증과 제작금융 중 일부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여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고, 한국이 90일 내에 동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한국도 EU의 조선 보조금을 문제 삼아 2003년 9월 WTO에 맞제소하였고, 2005년 6월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sup>23</sup> EU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는 수출보조

금으로 판정된 지원이 2004년 말 만기되어 추가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하였고, 한국이 제소한 사건인 EU의 지원은 WTO I, III조 및 보조금 협정 위반이 아니나 한국의 이행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DSU 위반이라고 판정되어 상호합의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TBR 절차상 동 사건도 종결되었다.

#### 한국도 대비해야 할 시점

EU의 TBR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EU FTA 추진에 따른 TBR의 개정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009년 말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이러한 유럽공동체 기관 간 권한의 변화는 통상 분야의 법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안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한·EU FTA 이행을 위한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에는 유럽의회도 절차 청원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24</sup> 따라서 향후 TBR에서도 청원권자가 기존의 기업, 산업, 회원국에 유럽의회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한국판 TBR이 필요하다. TBR은 미국의 301조와 달리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다. 이는 국제규범에 근거를 두고 피해를 입은 역내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최근 국회와 NGO를 중심으로 한국 통상정책이 행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같은 큰 폭의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장개방 협상 추진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절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 기업 또는 산업이 국제규범에

근거해 정부에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한국의 2010년 수출은 전 세계 7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은 세계 9위 수준이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전망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수출과 무역 순위는 각각 5,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나들고, 2011년이면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통상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혜자인 기업과 산업이 국제규범에 보장된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통상선진국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순히 일방적 무역제재수단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EU의 TBR의 제정 과정과 운용이 한국 산업에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sup>25</sup>

<sup>25</sup> 본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단체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sup>19</sup> European Commission (2008). Commission Decision of 10 September 2008 terminating the examination procedure concerning the measures imposed by the Republic of Korea affecting the import, distribution and advertising of cosmetics, perfume and toiletries products.

<sup>20</sup> European Commission (2010). General Overview of activ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involving the EU as complainant or defendant and of active cases under the Trade Barriers Regulation.

<sup>21</sup> 한·EU FTA Annex 2.D.

<sup>22</sup> WTO (2005).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

<sup>23</sup> WTO (2004).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301).

<sup>24</sup> 조성대 (2010). “한·EU FTA 체결에 따른 EU의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EU Brief』, 2(5), 15-18.



# EU 제조업의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 Competitiveness of EU's manufacturing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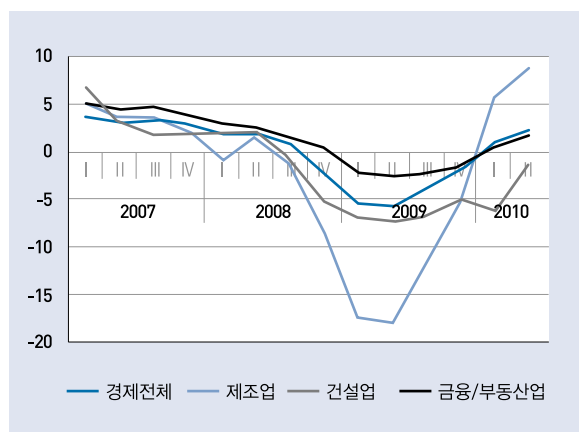
The process of de-industrialis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EU, yet its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s sector has been slow compared to other advanced economies. This makes the EU's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important for it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espite its importance, EU member states are lagging on the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become even worse in the near future. The EU must regain its posi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ncentrating on developing Key Enabling Technologies. EU member states should coordinate their R&D projects in order to avoid investment duplication and they should encourage their businesses and the academic sector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echnology clusters in the EU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this end and the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EU'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EU 제조업

EU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위기로 역내·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며 큰 타격을 받았다. EU 경제 규모는 2009년 2/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7% 축소되었고, 특히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같은 기간 건설업과 금융·부동산업이 각각 5.6%와 7.2% 축소된 것에 비해 제조업은 이의 2~3배 수준인 17.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EU 수출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 4/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9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6% 감소했다.

### ★ EU 경제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 변화)



자료: Eurostat

분야별로는 소비재보다 중간재와 자본재 생산업체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재와 자본재 제조업의 구매관리자지수(Markit's PMI)는 2007년에 50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2009년 초 2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EU 제조업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10년 2/4분기에 제조업은 8.7% 성장하며 EU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힘입어 EU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상반기에는 15.3%를 기록했다. 자본재 생산과 역외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초 자본재 제조업의 PMI는 60을 넘어섰고 2010년 상반기 역외수출은 19.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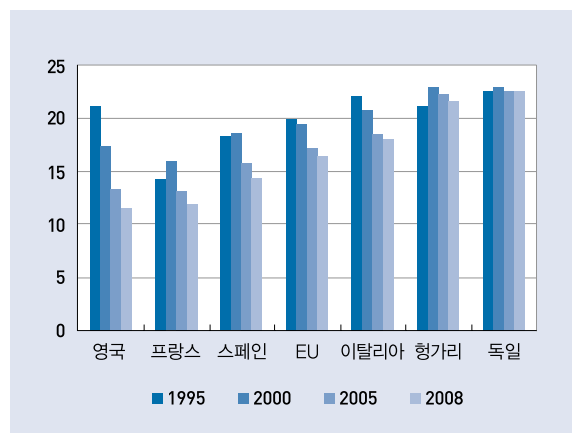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조업이 EU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경제정보 조사기관인 Markit Economics는 독일 제조업의 일자리가 1996년 4월 서베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지난 11월 발표했다. 또한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4분기 독일의 소비지출이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에 제조업 성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향후 EU 경제 불균형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의미

EU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

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EU의 총 경제적 부가가치(GVA)와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p와 2.2%p 감소했다. 국가별로 감소폭이 크게 다른데 2000년대 영국, 프랑스, 스페인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p 하락한 반면, 서유럽과 동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헝가리에서는 지난 15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20%대를 유지했다.

### ★ 주요 EU 회원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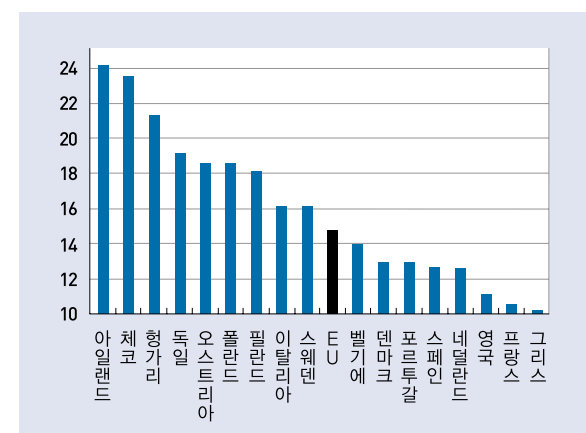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경제위기로 인해 2007년과 2009년 사이 단 2년 만에 2%p 이상 하락했다.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독일 제조업 비중마저 같은 기간 5%p 가까이 하락하며 2009년 19.1%를 기록했다.

회원국마다 속도가 다르지만 1970년대 이후 시작된 EU의 탈산업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 상품의 상대적 가격이 하

### ★ 2009년 EU 회원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 Eurostat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회원국들마다 상이하다.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구조상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2000년대 금융업과 부동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는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어 2009년 10%대 초반을 기록했다.<sup>1</sup> EU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5%에서 2004년 17.5%까지 하락한 후 17%대 초반을 유지해왔으나

락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탈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선진국 경제성장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EU의 서비스업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5년과 2005년 사이 미국 서비스업의 경제

<sup>1</sup> 영국 경제에서 금융·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23.7%에서 2009년 33.5%로 증가했으며, 스페인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에서 2006년 12.1%로 증가.

<sup>2</sup> Chang, Ha-Joon (2010).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London: Allen Lane.







성장 기여도(누적)는 19%p를 기록한 반면, EU 기존 회원국들의 경우 10%p에 불과했다.<sup>3</sup> 같은 기간 EU 기존 회원국들의 생산성은 제조업에서 29%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업들의 로컬 서비스에서는 12% 증가했고, 비즈니스 서비스 생산성은 변화가 없었다. 즉 EU의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성 변화가 EU 경제성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sup>4</sup> 또한 제조업은 유출효과 및 수요축진을 통해 금융업, 유통업, 부동산업과 같은 서비스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EU 회원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비교

EU 회원국들의 제조업 경쟁력은 비교적 쇠약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중론이다.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고위 임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sup>5</sup>에 의하면,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8위에 오른 독일이 EU 회원국들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독일이 받은 최종점수는 10점 만점에 4.80으로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미국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았다. 26개 분석 대상 국가들 중 폴란드와 체코는 각각 10위와 11위를 기록하였다. 낮은 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력을 가진 신규 회원국들의 제조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더해 동유럽 국가들은 주요 시장인 EU 기존 회원국들에 근접해 있고 폴란드는 내수시장이 크다. 중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 4개 EU 회원국들의 점수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프랑스는 하위권에 포함되었고 벨기에는 간발의 차이로 꼴찌를

### ★ 제조업 경쟁력 비교

세계			EU		
현재 순위	5년 후 예상순위	국가	현재 순위	5년 후 예상순위	국가
1	1	중국	8	8	독일
2	2	인도	10	9	폴란드
3	3	한국	11	12	체코
4	5	미국	16	17	네덜란드
5	4	브라질	17	20	영국
6	7	일본	18	21	아일랜드
7	6	멕시코	19	16	스페인
8	8	독일	21	22	이탈리아
9	11	싱가포르	23	23	프랑스
10	9	폴란드	24	26	벨기에

자료: Deloitte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0),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면했다.

분석 결과 EU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금보다 5년 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5년 후에도 8위를 지키지만 최종점수는 현재보다 약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포함된 10개 EU 회원국 중 순위가 상승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스페인 2개국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폴란드는 점수가 상승하는 반면 스페인은 오히려 하락한다. 이 밖에 독일과 프랑스의 2개국 순위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나머지 6개 국가들은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유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벨기예를 제쳐 5년 후에는 벨기예가 꼴찌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EU 회원국들의 예상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4위와 6위에서 한 계단씩 하락하는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17위와 18위에서 세 계단이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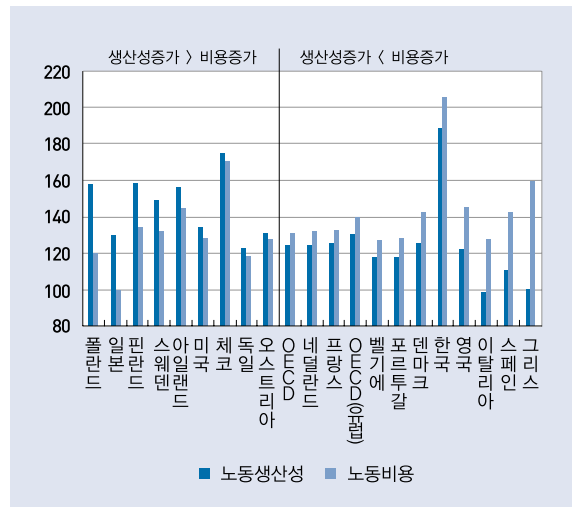
### EU 제조업 경쟁력 분석

EU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회원국들의 제조업 노동비용과 생산성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선진국들의 높은 제조업 임금은 높은 생산성을 일부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제조업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여타 회원국들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노동비용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IGS 국가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2000~2008년 사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노동비용이 생산성보다 각각 58%p, 32%p, 30%p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위노동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그리고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 2008년 제조업 노동시간당 생산성 및 노동비용

(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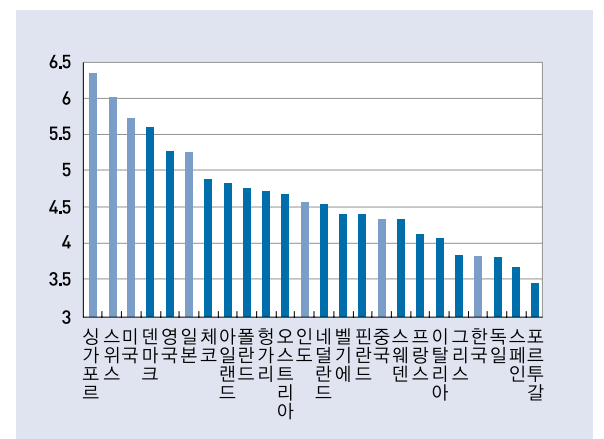


주: 1) 포르투갈, 일본, 아일랜드는 2007년 자료  
2) 생산성과 비용의 차이 순  
자료: OECD Stat

또한 여러 EU 회원국들의 노동시장은 국제기준보다 유연하지 못하다. 세계경제포럼 경쟁력 지수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sup>6</sup>를 살펴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 139개국 중 하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여타 PIGS 국가들도 상위 100위권에 들지 못한다. 덴마크와 영국만이 상위 20위권에 포함되어 있고 체코와 폴란드의 노동시장도 비교적 유연하다고 판단된다.

### ★ 2010년 세계경제포럼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주: 1~7로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유연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0),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둘째, 신흥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성장이 EU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EU 기존회원국들은 고도기술과 최고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EU27의 수입에서 기존 회원국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규 회원국들과 BRICs의 비중은 증가하

<sup>3</sup> Mischke, J., Regout, B. & Roxburgh, C. (2010). Why Europe lags behind the United States in productivity. *Mckinsey Quarterly*, October.

<sup>4</sup> EU 내 제조업 생산성 변화는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임. 스웨덴과 핀란드 등 5개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독일 등 6개 유럽대륙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51%와 35%였던 반면 남유럽, 즉 PIGS 국가들의 경우 8%에 불과. (Roxburgh, C. et al. (2010). Beyond austerity: A path to economic growth and renewal in Europe. Mckinsey Global Institute.)

<sup>5</sup> Deloitte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0).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sup>6</sup> 노동시장 효율성 지수의 일부로 1) 노사관계 협력 수준, 2) 임금 유연성, 3) 고용 경직성, 4)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 5) 해고 관련 비용, 6) 세율 수준 등의 지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산출.





고 있다. 소비재보다 오히려 중간재와 자본재 시장에서 기존 회원국들의 점유율이 더욱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신규 회원국들과 BRICs의 시장점유율 증대는 가 격우위만이 아닌 질적 향상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한다. 1999년과 2008년 사이 EU의 상위기술제품<sup>7</sup> 수입시장에서 신규 회원국들과 BRICs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p와 20%p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존 회원국들의 점유율은 10%p 이상 감소했다.<sup>8</sup> 인도는 풍력발전기 산업에서, 브라질은 항공기 산업에서 첨단기술과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신흥국들은 기술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2008년 EU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0년 전에 비해 8%p 증가하며 54.8%를 기록했다. PIGS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독일은 61%로 EU 평균보다 높다.<sup>9</sup>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EU 회원국들이 거의 모든 가스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웃국가들의 마찰은 EU 제조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EU 제조업의 미래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 회원국들의 제조업체들과 해외투자자들은 매력적인 제조업 기반을 찾아 동유럽 또는 EU 역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일랜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법인세 인하<sup>10</sup>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U는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 주요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술력 강세<sup>11</sup>를 보여 왔으며, 이 분야에서 미국의 비중은 감소했으나 EU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 개발에서는 EU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EU의 재정위기는 EU의 신성장 산업 기술 개발에 타격을 가할 소지가 크다. 여러 EU 회원국들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은 미래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EU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민관협력과 EU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중복

### ★ 첨단기술별 지역별 특허 출원 건수 비중

(단위: %)

국가	지역	1999~2001년	2005~2007년
생명공학	EU	27	27
	미국	51	44
	동아시아	13	17
정보통신	EU	32	24
	미국	45	35
	동아시아	14	33
나노	EU	26	26
	미국	51	40
	동아시아	15	27
재생에너지	EU	53	43
	미국	21	23
	동아시아	11	18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EU	43	32
	미국	22	14
	동아시아	25	50
에너지 효율성증대	EU	43	38
	미국	26	15
	동아시아	24	40

주: 1) 동아시아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NIEs)와 일본, 중국을 포함

2) 특허협력조약(PCT) 기준

자료: OECD, Patent DB

<sup>11</sup> 1999년과 2007년 사이 중국의 총 특허신청 건수는 10배 가까이 증가.

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크루즈 미사일부터 아이팟까지 현시대를 대표하는 제품들은 사실상 ‘포장된 서비스(packaged services)’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실제로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R&D 등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첨단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가치에서 원자재 및 조립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중국에서 조립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노키아(핀란드) N95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 가운데 51% 정도가 EU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13</sup>

한편,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와 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EU의 산업단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말 영국의 플라스틱 반도체 생산업체인 플라스틱로직은 영국이 아닌 독일 드레스덴에 1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정부의 지원 약속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겠지만, 이 같은 결정이 있기까지는 드레스덴이 첨단연구소들과 기술업체들이 모여 있는 유럽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U에는 현재 여러 미래유망기술을 대표하는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이곳들을 중심으로 한 EU 차원의 지원과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 미래유망기술 주요 클러스터

구분	EU	非EU
나노	독일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일본 교토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공학	프랑스 그르노블	캐나다 오타와
산업생명공학	영국 캠브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광학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캐나다 퀘벡
첨단소재개발	벨기에 왈로니아	중국 창사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0, Table 4.4.

EU집행위는 북해의 풍력과 지중해의 태양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운송할 수 있는 범유럽 전기 스마트그리드 개발과 가스 파이프 보수 및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더해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과 가스 공급 다양화는 EU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일각의 염려를 불식시키며 EU 제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sup>7</sup> 기술 수준에 따라 NACE 산업분류코드를 하위, 중하위, 중상위, 상위로 구분.

<sup>8</sup>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0, Table 2.5와 Figure 2.1.

<sup>9</sup> Eurostat: Energy Dependency Database.

<sup>10</sup> 2010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법인세는 30%가 넘는 반면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는 2000년 이후 10%p 이상 하락하며 2010년 20% 미만을 기록. (OECD Tax Database)

<sup>12</sup> Why you can have an economy of people who don't sweat. (2010. 10. 19.). *Financial Times*.

<sup>13</sup>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0.

<sup>14</sup> European Commission (2010). Energy infrastructure priorities for 2020 and beyond- A Blueprint for an integrated European energy network.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U의 환경 관련법

## EU's environmental legisl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U has adopted over 200 directives, decisions, and regulations to develop its environmental legislations. They reflect EU's community wide concerns i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range of measures is diverse from protection of climate change to waste management. Currently, more than half of 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s are affected or have been replaced by EU legisl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 role of ensuring that environmental legislations are implemented and enforced and it can open infringement procedures as a part of this function. As the Lisbon Treaty came into effect on Dec. 1, 2009, the EU has chos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its environmental quality as parts of its key objectives and it has stated detailed aims in setting its environmental legislations and principles. Now that the FTA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the EU,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U's environmental legislations as Korean firms plan to expand their presence in Europe.

### EU 회원국 환경법의 기초가 되는 EU 환경법

EU 체제는 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률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며, 법치주의하에 유지된다. EU의 환경보호도 법원(legal sources)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래 EEC설립조약에는 '환경(environment)'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1972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 이후 환경보호는 EU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sup>1</sup> 그리고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환경실천계획(EAPs: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s)<sup>2</sup>을 세우고, 역내시장 조항에 대기 및 수질 오염에 관한 규제조치를 확립해두었다. 또한 공동체 간 무역을 방해하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방지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환경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에 관한 수많은 조치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조치는 각국 환경법의 모든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각 회원국의 환경법 중 반 이상이 EU 환경법의 영향을 받거나 규제를 받고 있다.<sup>3</sup> 지난 40여 년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EU 환경법은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EU와의 FTA 시대를 맞이하면서 EU의 환경 관련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

### EU의 환경 관련 법률

EU는 지난 40여 년간 200개 이상의 규칙, 지침, 결정을 채택하면서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환경 관련 입법 조치들은 모든 환경 영역, 예컨대 수질, 대기, 자연, 쓰레기, 소음,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 의사결정참여권과 환경피해배상책임등과 같은 EU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증가해 환경정보접근권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EU의 환경 관련 법률 중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 단독으로 채택하는 규칙(regulation)은 일반적용성과 온전히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sup>4</sup> 따라서 당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집행위원회 단독으로 채택하는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데, 그

형식과 수단은 각 회원국이 결정하므로<sup>5</sup>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다.

지침에서는 주로 공동환경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며, 회원국은 주어진 틀 내에서 자국의 법령을 정비, 시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각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단독으로 또는 유럽의회와 의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결정(decision)은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수범대상을 회원국, 개인, 기업 등으로 특정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sup>6</sup>

### 환경지침의 채택

EU 환경조치의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EU기능조약 제191조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동 조약 제114조에 따라 역내시장을 설립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은 환경과 같이 EU와 회원국이 공통으로 권한을 가지는 분야에서 의미가 있다.<sup>7</sup>

EU는 주로 역내 국가별 상이한 환경 조치의 조화를 위해 EU 환경지침을 채택하는데, 환경 지침은 회원국에게 특정한 결과에 도달할 의무를 부여하며, 해당 의무는 주로 회원국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침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해당 지침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국내법(법률, 명령, 또는 행정조치)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국내 입법부는 지정된 기간 내에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일단 국내 환경법이 표준화되고 나면, 회원국이 정책을 수행할 권한의 범위는 주로 지침의 내용에 의존하게 된다.<sup>8</sup>

그러나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여전히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sup>9</sup> 한편, 회원국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EU 차원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sup>10</sup>

### 환경지침의 이행과 관련 소송

EU의 환경 관련 법률 중 90% 이상이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변형되는 것을 요구하는 지침으로 채택되는데, 공동체 차원에서 동의한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은 결국 회원국의 몫이다. 따라서 지침은 회원국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환경법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당해 지침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회원국이 해당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EU기능조약 제258조의 조약(의무)위반소송(또는 이행강제소송), 제279조의 가조치(interim measures) 또는 제260조에 따른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제258조에 따라 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이 공동체의 환경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동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279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판결에 앞서 사법재판소에 가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조치가 매우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조치이다.

회원국이 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260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동 재판소가 회원국이 관련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1</sup> 2009년 한 해, 집행위원회 산하의 환경총국(Environment Directorate General)은 이행강제소송을 위해 회부된 451건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환경이행강제소송의 상당 부분은 자연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최근 들어 대기와 관련한 영역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총국은 2009년에 EU기능조약 제260조에 따라 사법재판소가 내린 61개 판

<sup>1</sup> Jans, J.H and Vedder, H.H.B (2008). *European Environmental Law* (3rd. ed.). Groningen: Europa Law Publishing. p.3; Karakostas, Giannis (2008). *Greek & European Environmental Law*. Athens: Sakkoulas. pp.9-10.

<sup>2</sup> 유럽공동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환경실천계획(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2-2012)'은 집행위원회의 통보와 유럽의회와 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sup>3</sup> Douma, Th. W. (n. d.). *European Environmental Law after Lisbon: an introduction*. <[http://www.asser.nl/default.aspx?site\\_id=7&level1=12219&level2=14663&level3=&textid=38170](http://www.asser.nl/default.aspx?site_id=7&level1=12219&level2=14663&level3=&textid=38170)>

<sup>4</sup> EU기능조약 제288조 2문, 3문.

<sup>5</sup> EU기능조약 제288조 4문.

<sup>6</sup> EU기능조약 제288조 5문, 6문; 김대순 (2008). "2007년 EU 리스본조약의 개관". 『국제법학회논총』, 53(1), 151.

<sup>7</sup> EU기능조약 제4조 2항 참조.

<sup>8</sup> Jans and Vedder, supra note 1, pp.87, 127.

<sup>9</sup> 위의 글. p.88.

<sup>10</sup> 위의 글. pp.87, 98.

<sup>11</sup> European Commission (2010.4.21). Legal Enforcement: The infringements procedure <<http://ec.europa.eu/environment/legal/law/procedure.htm>>







결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건 중 대부분이 해결 단계에 있어서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sup>12</sup>

### 리스본조약과 EU 환경법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사실상 주요한 변경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sup>13</sup> 여기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EU 환경법상의 의사결정과 사법구제 등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조약은 舊 TEU와 마찬가지로 전문과 제3조 3항에서 EU의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적 발전까지도 아우르는 목표를 갖는다. 또한 제21조에 규정된 목표는 일반적인 대외정책(external action)의 방향을 결정하며, 제21조 3항의 통합규정에 의하여 강화된다.<sup>14</sup> 또한, EU기능조약 제13조에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리스본조약은 처음으로 동물을 ‘생명이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간주하였다.

통합원칙과 관련하여 리스본조약은 3가지 차원의 환경통합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EU기능조약 제11조(환경에 관한 통합원칙), 제13조(동물복지에 관한 특별통합원칙) 및 제194조 2항(에너지정책에 관한 특별통합원칙)이 그것이며, 이들 통합원칙 간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5</sup>

舊 EC설립조약 제174조 내지 제176조가 개정된 EU기능조약 제191조 내지 제193조는 환경에 관한 독립적인 장을 이루고 있는데, 동 조약은 기존 현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정책의 목적으로 ‘환경의 보존(preserve), 보호(protect) 및 개선, 인체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문제(climate change)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수단의 개발’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동 조항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도입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sup>17</sup> 제192조 5항에서는 환경정책 추진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이 부담하되, 회원국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럽이사회가 오염자부담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회원국의 부담을 유예하거나 제177조상의 EU공동기금(Cohesion Fund)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지원기금(LIFE: Regulation 1655/2000),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공동기금 등을 통해서도 EU 역내·외 환경정책 추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보전네트워크(Natural 2000) 사업, 중동구 환경기술지원, NGO 환경사업 지원 등이 그 예이다. 제193조는 동 조약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정책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EU집행위원회에 통지(notification)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기능조약 제194조를 통해 EU의 에너지정책이 독립적인 장의 일부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은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EU는 에너지정책을 환경적 관점에서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8</sup>

리스본조약이 도입한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은 시민발안권(citizens’ initiative) 제도이다.<sup>19</sup> 동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시민 주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부탁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리스본조약은 가중다수결제도를 보다 많은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리스본조약은 과거 공동결정절차를 수정한 보통입법절차를 따르게 하는 등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다소 실망을 안겨주었다.<sup>21</sup> 그러나 유럽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어 환경과 관련한 보다 많은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너지정책과 달리, 환경세에 관한 입법행위에 있어 EU기능조약 제192조 2항은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권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에너지에 관한 환경세의 경우에도 이것이 필요한 절차적 수단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리스본조약은 EU기능조약 제258조(舊 EC설립조약 제226조)를 통해 조약위반소송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법은 물론 유럽법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제260조 3항에 특별절차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제263조(舊 EC설립조약 제23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전제요건이 축소되었다.

리스본조약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EU헌법제정 조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EU법은 환경문제와 역내시장의 완성이라는 두 주요 이슈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EU 환경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EU 차원의 환경보호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시작되어, 단일유럽의정서에서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언급과 함께, 환경에 관한 독립된 타이틀이 제정되었다. 뒤이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환

★ 표 1: EU조약과 EU기능조약의 환경에 관한 주요 규정

TEU	내 용
제3조 3항	EU의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수준 높은 환경 보호와 환경 수준 개선)
제21조 2항 (d), (f)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장려 및 환경수준의 보존과 개선
TFEU	내 용
제11조	통합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제13조	동물복지 요건
제34-35조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
제36조	제34조와 제35조의 예외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제114조	역내시장과 법의 조화
제191조	환경보호
제192조	환경보호의 법적 근거
제193조	환경보호

경 보호를 공동체의 목표와 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이후 체결된 조약에서도 환경 관련 규정이 발전 을 이루었다.

EU는 지난 40여 년간 200개 이상의 규칙, 지침, 결정의 채택을 통해 EU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다루는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EU환경법 중 90% 이상이 서로 상이한 국내 환경 지침의 조화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하는데, 만약회원국이 해당 환경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U기능조약 제258조의 의무위반소송(또는 이행강제소송), 제279조의 가조치 또는 제260조에 따른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EU는 회원국과 함께 교토의정서와 같은 주요한 다자간 환경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EU의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준 높은 환경보호 및 환경 수준 개선을 규정하고 있고, EU기능조약 제191조에서는 구체적인 환경정책의 목적과 환경원칙(수준 높은 보호의 원칙, 예방

<sup>12</sup> European Commission (2010.4.21). Legal Enforcement: Statistics on environmental infringements <http://ec.europa.eu/environment/legal/law/statistics.htm>

<sup>13</sup> Vedder Hans (2010). Analysis: The Treaty of Lisbon and Europea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22, No. 2, p.286.

<sup>14</sup> 위의 글. p.288.

<sup>15</sup> 위의 글. p.289.

<sup>16</sup> 위의 글. p.290.

<sup>17</sup> 위의 글. p.291.

<sup>18</sup> Vedder, *supra* note 43, p.291.

<sup>19</sup> EU조약 제11조 4항.

<sup>20</sup> Vedder, *supra* note 43, p.292.

<sup>21</sup> EU기능조약 제192조 1항: Vedder, *supra* note 43, p.293.





원칙, 세이프가드 조항, 오염자부담 원칙, 원천 원칙, 사전주의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92조는 EU가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절차(보통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공동결정절차가 다소 개명되고 수정된 보통입법절차의 채택은 전반적으로 유럽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환경과 관련한 보다 많은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이제 EU환경법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한국 환경법을 증진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 The decline of multiculturalism in EU

Recently, anti-immigration sentiment has been spreading across the EU and Europeans are asking themselves whether their society can truly foster multiculturalism. Even Chancellor Merkel expressed her concern and said that Germany's attempt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has "utterly failed." This phenomenon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a revival of nationalism, but it is rather rooted in economic problems including its high unemployment rate. Politically, the current issues of multiculturalism in the EU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conservative parties are in power in a number of countries. Fixing EU's immigration policies will not be able to stop the spread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on its own, but what the EU needs is the effective process of immigrant integration. It is up to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or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for immigrants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 반(反)이민 정서와 유럽 사회의 균열

2차 대전 이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대규모의 노동 이주자를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실정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이주자 통합 모형을 채택하여 발전시켜 왔다. 서유럽 국가들의 공식적인 대규모 노동 이주자 수용은 1973년에 중단되었다. 과거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유럽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로 타자화(他者化)되고 있다.

유럽에서 이주 및 다문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부터이다. 유럽과 비유럽 간의 이주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의 심화로 유럽 지역 내 이주 및 이동도 매우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전체 인구의 10~2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와 다문화 현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언어와 전통, 종교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한 사회 안에서 어우러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어우러져 존재하느냐 하는 방법, 즉 이주자 통합정책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다문화주의 모형' (스웨덴), '차별적 배제 모형' (독일), '동화주의 모형' (프랑스)이 그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집단 고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스웨덴의 경우 정치적 참여도 보장해왔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해온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 영국 등이다.

다문화주의와 구분되는 '차별적 배제 모형'이나 '동화주의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어온 이주민 통합정책이다. 다문화주의는 아니더라도 다문화 사회를 인정해온 나라들도 많은데, 독일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유럽은 다문화 사회인가?'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이주민과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서 다문화 사회 실패를 외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극우·반이민을 주창했던 유명 정치인인 뫼르포트완(Pim Fortuyn)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다문화주의가 크게 후퇴하였다. 영국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로 반이슬람 정서가 퍼져 있다. 다문화 사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반이민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이민 정당의 활동이 활발하며, 2010년 스웨





덴 총선에서는 반이민 정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반이민 정서로 유럽 사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 스웨덴의 다문화주의와 반이민 정당

지난 9월 스웨덴 총선에서 반이민주의를 내건 스웨덴 민주당(SD)이 5.7%(20석)를 득표해 사상 첫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1988년에 창당된 스웨덴민주당은 그 이름과 달리 인종차별주의성향이 강한 정당이다. 스웨덴 역사상 우파연합의 첫 재집권이라는 놀랄 만한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선거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여 반이민 정당의 첫 의회 진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반이민 광풍에 스웨덴도 편승했다는 논평이 주를 이루었다.

스웨덴 사회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통합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실생활에 적용해왔다. 모국어 교육,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회복지, 취업지원, 법률지원, 이주민 인권 옴부즈맨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스웨덴 사회는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포용력이 EU 내에서 가장 높다는 보고도 나왔다.

스웨덴의 다문화 정책은 1975년 의회가 최초로 통합정책을 승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75년의 통합정책은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평등, 선택의 자유, 파트너십이 그것이다. 평등은 기존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도 스웨덴 국민과 똑같이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 제도 내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그들이 자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파트너십의 의미는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의 문화 선택권과는 별개로 스웨덴의 가치 및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회는 이러한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감소시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통합정책은 1996년에 그 방향성

을 바꾸게 되는데, 새로운 통합정책은 모든 정치영역 내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sup>1</sup>

스웨덴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목표인 문화적 인정과 존중, 사회적 평등과 분배, 정치적 참여 보장을 실현시켜왔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외국인에 관대한 이민정책은 스웨덴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스웨덴마저 반이민 정서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스웨덴에 유입되는 이민자는 매년 10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이 스웨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 혜택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웨덴인들은 우파뿐 아니라 전통 사민당 지지자들 중에도 많다.

최근 들어 이민자들이 스웨덴 정치를 흔들고 있다. 지난 9월 선거에서는 그들이 대상이 되어 반이민 정당의 돌풍이 일어났지만, 2006년 선거에서는 이민자들 스스로 대거 우파연합을 지지하여 12년 만에 우파연합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우파연합에서는 고용증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업률이 높았던 이민자 집단은 기존의 복지혜택에 더해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9월 총선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등 이민자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도시의 전통 사민당 지지 근로자들이 사민당이 아니라 반이민 정당을 선택한 결과이다.

#### 독일 총리의 이민자 비판

독일에서도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것도 메르켈 총리를 포함하여 주요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메르켈 총리의 “독일의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발언으로 독일 내 다문화 논쟁이 커졌다.

독일은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였으며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메르켈 총리의 불만은 이주자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따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 내 400만의 무슬림은 독일어도 배우지 않고 독일 사회와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말 출간된 독일연방중앙은행 이사인 티로 사라친(Thilo Sarrazin)의 저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도 반이민자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sup>2</sup> 그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인해 독일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악화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독일사민당 당원이고 사민당원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이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 기민당(CDU)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CSU)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도 동화를 거부하는 이주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유럽 다문화 사회의 위기와 그 원인

이러한 반이민 정서, 다문화 사회 위기 현상들에 대해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반이민·극우 정당은 국가민족주의 또는 신나치주의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반이민 정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은 자신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그들은 이민자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독일에서 다문화 사회 자체를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반이민 정당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독일 또는 유럽에 이주자나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sup>3</sup> 메르켈의 다문화 사망 선언이 다문화의 폐해로 인해 독일인들의 의식이 다시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되돌아가 급기야 파시즘으로 변질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이주 정서의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다문화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보호주의가 나타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경기침체, 긴축 재정으로 실업이 늘고 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이주민이 일차적으로 배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유럽 경기침체 시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이주 장벽 높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이민제한정책을 펴고 있어 유럽의 이주 및 다문화 문제는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 그리스, 아일랜드 등 같은 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로 독일이 부담을 지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각한 유로지역 재정위기에도 독일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인들이 자국민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다문화 사회의 위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우파정권의 집권과 관련이 있다.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19개 국가에서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반이민·인종주의 정당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우파 정치인들이 미디어와 함께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다문화 사회의 위기를 부풀리고 있는 측면도

<sup>1</sup> 백석인 (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연구』 제9호, 35-68.

<sup>2</sup> 이원경 (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구상” 『G20 BRIEF』, 통권 제3호.

<sup>3</sup> 사실 글로벌화와 유럽 통합으로 1990년대 이후 EU 역내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있다. 이슬람 혐오주의, 인종주의운동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다문화에 따른 ‘문화 경쟁’, ‘종교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민 소수자들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화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유럽 정치의 핵심 문제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이주자 문제와 다문화 사회이다.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위기는 국경 및 경계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격의 경계를 만들거나 강화시키기도 하는데, 문화적, 인종적 경계 또는 배제가 그것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글로벌화로 국민국가의 경제 및 사회질서가 흔들리면서 대중 특히, 하층계급은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주노동자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극우파에 기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유럽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럽의 정치인들은 다문화 사회의 위기 담론을 확대시키기보다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가 추구하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다문화 사회와 통합의 문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는 위기이다.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한다’와 ‘사실은 원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원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문화 사회를 지지할 경우 양쪽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주민을 수용한다면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민자나 이주민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갖고자 하는 한 다문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많은 서유럽의 국가들에서 나타나

는 이주자 통합정책의 변화가 다문화주의 방향보다는 이주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소수 집단의 문화를 배제하는 동화주의 모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동화주의는 다문화 자체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다문화 사회의 전망은 밝지 않다. 더구나 최근 유럽 국가들의 내·외부적 환경은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물질·비물질 자원을 많이 갖도록 지원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몫이다. 이민자 스스로가 이민 온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등 더 많은 통합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유럽 국가들도 이들을 지원하는 데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생각해볼 때이다. ★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독일은 유로지역 경제의 모범답안인가?

### Why Germany is not a model for the eurozone

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has published an essay arguing against the view that the eurozone members should benchmark Germany's economic model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analysing various economic indicators, we find that Germany's economy is indeed very strong and its trade surplus is so large that it calls itself an "Export Weltmeister." However, Germany's large external surplus is not due to its economic efficiency and dynamism, but rather it is the result of its relatively low growth in wages and its high savings rate. Also, years of weak business investment spending at home led to a rapid expansion of its external surplus. These evidences show that Germany's growth model is not sustainable and it cannot be a benchmark for other eurozone members. In conclusion, this essay argues that "an unreformed Germany would be a poor model for the eurozone as a whole," and "turning the eurozone into a larger Germany would have adverse consequences." Also, it sends across a message that Germany must reform its export-dependent growth model in order to shift towards a more balanced economy.

유럽개혁센터(CER: Centre for European Reform)는 위기에 빠진 유로지역이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경제가 유럽 경제의 개혁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였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극에 달했을 무렵인 2009년 초반에도 독일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며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유럽 각국에서는 독일의 경제 정책 운용에서부터 독일인의 근면함까지 언급하며 다각도로 독일경제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유로지역 경제가 독일경제의 확대판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유럽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독일경제는 매우 건실하다. 스스로를 세계 수출의 챔피언(Export Weltmeister)이라고 자부할 만큼 뛰어난 무역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는 2008년 GDP 대비 8% 흑자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흑자만을 가지고 독일경제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독일경제의 무역 흑자는 독일경제의 효율성이나 역동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거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서 독일경제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성적표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자국 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인들의 삶의 질이 합당한 수준으로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보다 저평가된 독일의 실질 임금은 유럽 전체의 경제 균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독일경제가 이렇게 순항하는 것은 결국 투입된 요소(인풋)보다 결과물(아웃풋)이 좋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낮은 임금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축률이 높고 국내 투자가 적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경제의 기초 구조가 기대만큼 탄탄하지는 않으며, 국내 불균형을 담보로 한 수출 주도적 경제 성장은 문제라는 비판이 독일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독일 정치인들이 이러한 대내외적 비판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독일경제가 유로지역 경제의 모범답안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개혁의 해법은 장기 성장을 고려한 것 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 분야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분야는 생산성이 낮고 성장세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독일의 경쟁 제한적인 일부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독일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낮은



임금과 질 낮은 서비스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로지역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일을 해법 모델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결론짓는다. 설사 유럽이 독일의 경제 구조를 따르고자 하더라도 유럽이 독일경제의 확장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유럽 이외의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충격은 헤아리기 힘든 정도라고 지적한다. 즉,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을 전가하고, 유로지역 경제권 내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수치적으로만 향상된 경제적 결과를 만드는 것은 유럽의 지향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독일은 분명 뛰어난 대외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것은 유럽 대내외의 다른 국가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나 스페인이 대외 흑자를 기록했다면 반대로 독일은 그만큼의 적자를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한 국가가 이득을 보면 다른 국가는 손해를 보는 식으로 경제가 반드시 제로섬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수출 주도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는 없다. 유로지역이라는 세계 제2의 경제권이 독일과 같이 움직인다면, 세계 경제는 분명 재균형화(Rebalancing)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즉, 모든 국가가 승리하는 독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 이상적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료: Centre For European Reform (2010). Why Germany is not a model for the eurozone.)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제2회 EU Week 개최 The Second "EU Week"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제2회 EU Week가 진행되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EU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EU에 관한 리더십 토론회와 논문대회를 통해 평소 EU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나눌 수 있었으며, 또한 모의정상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해 보기도 하였다. 대회 참여자는 100명에 달했으며, 특히 결선과 시상식에는 200여 명의 학생이 몰려 2009년보다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상식에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인 우베 비센바흐(Uwe Wissenbach), 양일선 연세대학교 부

총장, 박영렬 연세-SERI EU Centre 소장, 김득갑 연세-SERI EU Centre 부소장, 박용석 연세-SERI EU Centre 부소장, 김형철 연세 리더십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행사에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한국그린포스펌프, 인스트앤영어드바이저리, BMW Korea, 코오롱건설 등이 후원을 해주었다.

또한 EU센터는 참석 학생들이 앞으로도 EU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제2회 EU Week 개최 The Second "EU Week"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second "EU Week" on the week of October 22nd at Yonsei University. There were many attendees from Yonsei University and other Korean universities. There were also students from abroad participating in the event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entre to encourage students to get more involved in issues related to the EU.

Students met others who shared their curiosity when they participated in "Leadership Discussions" and "Essay Competition." Also,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mock EU Council Meeting" advocating different member states' views on a number of topics. There were more than 100 participants at various events and around 200 people attended the final stages and the closing ceremony, reflecting that students' interest has risen compared to last year.

The EU delegation acting head Uwe Wissenback, Vice Chancellor Yang Il-Son of Yonsei University, Director Kim Hyung-Chul of Yonsei Leadership Centre, and Director Park Young-Ryul and Deputy Directors Kim Deuk-Kap and Park Yong-Suk of Yonsei-SERI EU Centre, attended the event and encouraged students' participation.

A number of leading corporations supported our second "EU Week" and they include Lufthansa, Grundfos Pump, BMW Korea, Ernst and Young Advisory, and Kolon Construction. The EU Centre plans to continue to hold various events with an aim of promoting the EU and the Centre will provide systematic support in order to expand our network.

